

결산안·대법관 인준안 오늘 처리

여야 원내대표 협상 합의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여야정 협의체’ 10월 구성
세월호 특별법·국회법 개정안 11월5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8일,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총무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8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박영

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는 한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가운데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가급적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특활비 편성·용처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마련해 각자 예산 개선포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선(先) 상임위 논의-후(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2단계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중 FTA와 관련된 상임위원

회고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후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 구성,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는 다른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상임위 청문회의 개최 요건을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소관 현안 조사’로 확대하면서 보다 폭넓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적연구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첫 회의는 다음 달 8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법안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불합’했다.

양당은 이날 ‘여야의 중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인권재단 설치·대북전단 살포금지

여야 북한인권법 핵심쟁점 합의…미타결 쟁점 지도부에 위임

여야는 최근 북한인권재단 설치와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던 북한인권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외통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정리해 이를 양당 대표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여야는 우선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내용을 넣고, 통

일부에 북한인권증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통일부 장관이 지칭하는 인권증진 사업, 정책대안 개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맡게 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해왔으나 간사 간 논의에서는 이를 빼기로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총선 앞 포털 길들이기 중단을”

새정치 “네이버 등 국감 증인 채택, 군부독재시절 연상”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려는 새누리당의 계획에 대해 “포털을 길들이기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포털 편향성을 주장해왔다. 선거를 앞두고는 포털 압박의 포석이 아닐 수 없다”며 “포털을 검열하고 검박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던 군부독재시절을 연상

케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군부독재 시절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면서 “포털을 검박하면서 편집권을 침해하고 지금까지보다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비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최근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 “새 전국 정당 필요”…宋 “혁신 통한 정권 교체”

〈주선〉 박 “새 전국 정당 필요”…宋 “혁신 통한 정권 교체”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 ‘신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사)한반도미래연구원이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신당,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의 쟁점 토론회에서 정당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자들간에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호남발 신당창당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박주선 의원은 사실상 ‘긍정’을,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실패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 없는 정당, 민주주의 없는 친노패권 정당 등 (이런 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평가”라고 지적한 뒤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수권대안정치세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신당창당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친노세력은 호남을 구태정치 세력으로, 배제와 극복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있다. 개혁을 명분으로 호남 정치인만을 몰갈이 대상으로 삼아 호남정치를 고사시키는 것에 대한 비난도 쇄

하고 있다”며 “지역주의 정치가 아닌 호남인의 정신, 가치, 힘으로 시대정신에 부합한 전국정당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송 전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갈 3대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야권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 총선, 대선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 등은 개인의 대선승리가 아닌 당의 정권획득에 헌신해야 하고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과 신인과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정책과 민생·경제분야, 기업인, 전문가의 과감한 영입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신당 출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새 정당은 결국 호남에 토대를 둔 정당이 될 것이며 정치세력의 교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신당 출현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용섭 전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내현 의원, 용두-담양 도로확장 예산 15억 확보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용두-담양 구간 도로 확장사업에 국비 15억원이 편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북구 을)은 7일 광주 북구 용두동과 전남 담양 대전면을 잇는 용두-담양간 도로 확장 사업 예산이 내년 국고 예산에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용두-담양간 도로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주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차선에 불과해 심각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광역도로로 지정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남 점령 구간의 확장공

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미뤄왔다.

임 의원은 용두-담양 구간을 광역도로가 아닌 혼잡도로로 지정을 추진, 올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 예산으로 15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임 의원은 “3차 혼잡도로 지정을 연말쯤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조기 선정이 되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2등 - 리류 스타일러(1명)

* 3등 - 아이패드(3명)

* 4등 - 족욕기(10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